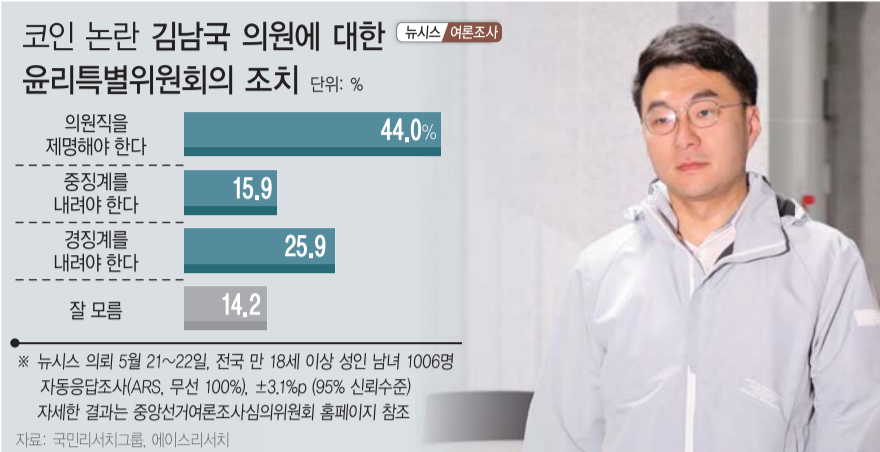


'제명' 해본 적 없는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 수위 이목집중

21대 국회, 징계안 처리 '0건' 이전 국회도 대부분 경고·사과 수준 여론조사 응답자 44% "제명해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가 김 의원 징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과 별개로 그간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숨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윤리특위는 여야가 제소한 김 의원에 대한 건에 대해 살피는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징계 심의가 이뤄지면 늦어진다며, 곧장 국회 본회의로 징계안을 넘겨 제명하자고 주장하는 반



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는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맞선다.

국회법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심의한 뒤 징계하도록 돼 있다.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제명을 제외하면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은 숨방망이 수

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논란으로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한 수준은 대부분 경고·사과·출석 정지 등에 그쳤다. 최고수위의 징계인 '제명'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강용석 전 의원(2011년), 성폭행 의혹이 있는 심학용 전 의원(2015년)뿐이다. 하지만 심 전 의원은 자진 사퇴해서 징계를 피했고,

강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부결됐다. 결국 제명 징계가 내려진 건 한 건도 없는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징계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다. 20대 국회에서는 47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으나 회기 만료에 따라 그대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39건의 징계안이 있으나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는 뉴시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에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치'를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44.0%가 '제명 조치해

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목소리는 15.9%였다. 경징계는 2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2%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명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 응답은 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제명'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중징계'(14.2%), '경고'(5.4%) 순이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경고'가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명'(15.6%), '중징계'(14.5%)의 순이었다. 정의당 지지층도 '제명'이 31.3%로 가장 높았다. 무당층 역시 '제명'이라는 응답이 35.3%로 다수였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하이투자증권

연말까지 iM하이 거래 시
국내주식
미국주식
수수료

기간 2023.05.23 - 2023.08.24

대상 비대면 스마트PB센터로 개설된 최초 신규 및 휴면 계좌

*이벤트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하이에서 시작하는 투자혜택의 중심

준비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신분증(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 1단계 iM 하이 설치 (웹사이트 or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이투자증권 또는 iM하이 검색)
- 2단계 iM하이 App에서 비대면계좌개설 신청하기 클릭
- 3단계 정보입력,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
- 4단계 하이투자증권에서 입금된 1원 입금확인
- 5단계 혜택 받을 준비 완료하고 거래시작하기

www.hi-ib.com | 디지털컨택센터: 1588-7171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1795호 (2023.05.23 ~ 2024.05.22) 하이투자증권 준비감사인 심사필 제23-000-133호 (2023.05.23 ~ 2024.05.22)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권 투자상품은 자산가격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 또는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 잔고나 유자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의 일반위탁수수료율은 거래금액과 매체에 따라 국내주식 0.0972%~0.4972%, 선물 0.002%~0.04975%, 옵션은 0.15%~1.4%(수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미국주식 수수료 혜택 대상이 아닐 경우 미국주식 매매수수료는 0.25%(온라인기준)입니다. (예: 시, SEC FEE 0.0008%(이벤트 시작일 기준), 계좌금 별도 징수)
- 해외주식 환전 시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1%수수준으로 적용됩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매매차이에 관하여 연250만원 기본 공제 후 영도소득세22%(지방세포함)가 과세됩니다. 또한 과세대상 PTP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매도금액의 10%가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 일중에는 거래전락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단기간 내에 상당액을 손실할 수 있고, 잦은 매매로 인한 세금 및 수수료의 과다발생으로 수익 실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이벤트페이지 하단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5대 강력범죄 마약사범 급증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최춘식 의원 "마약이 실생활 잠식"

살인·강도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살인·강도 및 강제추행·강간·상해·폭행)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에서 2021년 9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16~2021년까지 6년간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총 451명에 이른다. 2016년 27명에 그쳤던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7년(38명), 2018년(92명), 2019년(116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은 85명으로 2019년 대비 다소 줄었으나 2021년 93명으로 다시 늘었다.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꾸준히 증가하는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 대응 차원에서 '연속성 있는 집중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쪼먹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법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사용자가 강력 범죄(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이 핵심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데 대해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국정원 "北 사이버공격 74% 이메일 악용"

피싱 이메일 45% 네이버 위장

최근 3년간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 중 74%가 이메일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5일 북한의 해킹공격 유형, 사칭기관, 해킹공격에 사용한 메일 제목 및 실제 사칭 계정 등 2020~2022년까지 북한 해킹조직 사이버 공격 및 피해 통계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 해킹조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지속적 해킹공격을 진행하고 있어 대(對)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 이번엔 처음으로 북한 해킹공격 관련 통계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보안프

로그래밍의 약점을 뚫는 '취약점 악용(20%)'이나 특정 사이트 접속 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위터링 홀(3%)' 수법 등도 활용했지만, 이메일을 악용한 해킹공격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정원은 북한이 메일 수신자가 해당 메일을 별다른 의심 없이 열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히 '발신자명'과 '메일 제목'을 교묘하게 변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 이메일의 45%는 네이버를 위장했으며, 카카오톡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으로 위장한 이메일도 23%로 파악됐다. 이어 금융·기업·언론사(12%), 외교·안보 기관(6%) 순으로 집계됐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